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는 14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임시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강희민기자

“원전 오염수 방류시 日 수산물 유통 저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제주서 긴급성명 채택
 국제사회 검증 수용·오염수 정보 투명 공개 요구
 道, 총영사 초치 거절 대비 항의서한 작성도 끝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제주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한다. 전국 시·도의회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저지하기로 했다.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임시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제주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인 협의체로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16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전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자 긴급히 철회 촉구 성명서를 안건으로 올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속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이용하고 있는 ‘다핵종 제거설비’로는 수산물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내부 피폭을 유발하는 삼중수소를 없앨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2차 정화를 통해 주요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을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원전 사태 이후 최근까지 보여준 일본 정부의 행위를 볼 때 더 이상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이번 결정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반환경적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저지하겠다”면서 “일본은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모든 정

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제주도는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가 초치 요구를 거절할 때를 대비해 항의서한 작성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초치(招致)는 ‘안으로 불러들인다’는 뜻으로 외교적으로 엄중하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도 관계자는 “통상 주재국이나 주재국 지방정부의 초치 요구를 받는 총영사는 일본외무성의 승인을 얻어 초치 요구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의 서한은 일본외무성이 초치 요구를 거절할 때를 대비해 우리 측의 항의 의견을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현재 단계에선 그 내용을 공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를”

문 대통령, 어제 청와대 내부회의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설

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서관실이 오늘부터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고 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빛 공해 심한 곳 조명관리구역 지정 검토

도,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제주도가 인공조명 등으로 과도한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까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빛공해 저감 방안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도내 100곳을 표준지로 선정해 빛 환경 실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상민기자

병역명문가 공영관광지 무료 혜택 전국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만 주던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전국 병역명문가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가 현역 복무를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제주지역에서는 169가문·971명이,

전국적으로는 7613가문·3만8665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돼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도내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공영관광지 입장료 등을 면제해 왔지만 이번엔 그 혜택을 전국 모든 병역명문가가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감면 혜택은 병역명문가 당사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도 받을 수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오염수 유입·수산물 안전 중점 관리” 해수부, 오염수 방출 관련 해양수산 대응 나서

해양수산부가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면밀히 수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 대응 방안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식약처의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수입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여기에 더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치, 미역 등 40여 종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검사에 소요되는 분석 시간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망을 촘촘히 해 삼중수소, 세슘 등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을 면밀

히 감시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미 항만 조사정점 7개소를 추가해 해양수산부가 조사하는 전체 정점을 총 39개소로 확대했고, 올해는 동·남해 및 제주 등 주요 해역의 13개 정점에 대해 연간 조사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려 해양방출 전·후의 우리 바다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조사한다.

원전 오염수의 영향 예측도 고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정부 등으로부터 해양방출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여부, 유입시기 및 농도 등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단시간 내에 과학적으로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 코로나19 14일 17시 기준 확진 667(4)

대를 이어 풀이는 53년 정성

제주도의 아침을 깨우는 **진한 한 그릇!**

소고기 선지해장국 전문 **미풍해장국** 신제주본점 이전개업

4월 16일 (금요일)

왔당갑서 대표 김재형 배상

미풍해장국 신제주본점

제주시 선덕로 2
 064)749-6776, 010-8007-7522

도청방향 ↑ 북지피부과 신제주우체국
 ↓메종글래드호텔 KCTV 방향 ↓